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 84억 긴급 지원

송 지사,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면담·건의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65억원 지원 확정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9억원 추가

전북도는 지난 9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84억의 예산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지난달 21일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직접 만나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

로부터 65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됐다.

송 지사는 김장관과의 면담에서 “군산지역 산업 전반이 위기에 봉착해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행안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특히, “군산산업단지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으로 도로파손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고 타 지역으로의 업체 이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노후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함을 설명했다.

또한,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 중심지가 된 고군산군도에 그늘막 쉼터, 해안데크 등 관광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고군산 장자도항의 조기 개발 등에 필요한 사비 지원도 건의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상권의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산 공설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고군산군도 장자도항 관광편익시설 설치에 4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무리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군산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에도 5억원이 지원된다.

송 지사는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의 불편해소,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방안도 적극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회 청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청·장년들의 취업 고민 '끝'

전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전주시가 맞춤형 일자리행사를 통해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청·장년 구직자들과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돕는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회 청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여한 업체는 평화동 영무에다 음이온아트 맞은 편에 오는 4월 신규 오픈 예정인 (주)오식자재도소매마트로 경리사무원과 회계사무원, 급식조리사, 데스크안내원, 매장계산원, 배송납품운전원 등 6개 직종의 총 50여 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했다.

청·장년층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과 신규 개업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일자리행사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는 참여 기업 구인 조건에 맞는 구직자 개개인별 상세한 맞춤형상담을 통해 서류를 접수받았으며 이날 서

류전형 합격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는 구인 조건에 적합한 서류 합격자들만 직종별로 시간대를 달리해 면접이 진행돼 면접자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고 구인 업체는 구인 홍보와 서류 접수, 면접까지 신규 인력 채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했다.

이날 현장 면접에 참여한 이효택 (주)오식자재도소매마트 점장은 “신규 오픈하는 마트라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다보니 구인 홍보 및 직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주시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인력 채용에 큰 도움을 받아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용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인력을 채용하고 구직자는 관심을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이 필요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속적인 면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탄소융합기업 신상품 개발 도움

탄소융합기술원, 전주 친환경산단내 개발지원센터 구축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탄소융합소재 기업의 신상품 개발을 돕는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비 15억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입해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에 건평 2640㎡, 연면적 5833㎡ 규모의 신상품개발지원센터를 구축, 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신상품개발지원센터는 모집공고 및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 9개 탄소복합소재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했으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 지원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입주기업은 전북지역 유망기업인 성실실업(전주)와 하늘항공(완주), 크린앤사이언스(정읍), 불스원신소재(군산) 등 4개 기업과 (주)동하정밀(충북), (주)한국종합기계(부산), 티이엔지

(대전), 거광이엔지(충북), 한국파렛트풀(경기)을 포함한 모두 9개 기업이다.

지원센터는 탄소복합소재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국비 15억원과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입주 선정기업들은 이달부터 계약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해 신제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경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신상품개발지원센터장은 “탄소융합기업이 자체 아이템개발을 통해 양산체제가 될 수 있도록 토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을 이루어 탄소국가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굳은 표정의 안희정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미포구 서울서부지검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북도,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 총력

전북도는 산불발생 위험이 최고 높은 시기를 맞아 최근 도청 회의실에서 2018년 봄철 산불안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지방경찰청, 육군 제35사단, 제206항공대, 서부지방산림청, 정읍·무주국유림관리소,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전북도교육청, 전북지방우정청, 전주기상지청 14개 시·군 등 30개 유관기관 관계관 52명이 참석하여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활동과 진화 공조체계 유지방안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협의했다.

또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별 주요업무분담, 범도민적

홍보활동 및 순찰강화, 산불의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체제 확립, 신속하고 일사 분란한 산불현장 통합지휘 체계 구축 등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각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불안전을 위해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녹색전북 구현을 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감시활동과 예방활동에 적극 힘써 나가자”며 협조를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내버스 정시성 높인다

시, 새학기 맞아 버스 운영 실태 현장 점검 승객 불편 초래 결행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

버스스타가 편리한 도시 만들기 나선 전주시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학과 개강시기를 맞아 시내버스 운행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는 7개반 1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12일부터 3주간 전주대와 비전대, 전북대, 평화동, 삼전동, 송전동, 호동골 등 기점과 종점 현장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행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 단속을 벌인다.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시내버스 임의결행 여부 △조·연발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임의결행과 조발·연발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임의결행·노선이탈의 경우 과징금

10만원, 조·연발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승차거부와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정차와 승객 승·하차 전 출발 등의 경우 운수 회사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종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이용해 정확한 버스도착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120여개 승강장에는 기·종점 출발시간과 도착예정 시간이 담긴 안내문도 부착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정시성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연중 수시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인권센터, 인권단체와 간담회

전주시가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소수자 등 각 분야별 인권단체와 머리를 맞댄다.

시와 전주시인권센터는 지난 9일 센터(서소동동 현대해상 8층)에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16개 여성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3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초청 간담회를 필두로 오는 11월까지 여성 인권과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등 8개 분야의 85개 인권단체를 만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3월 초청간담회는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인권센터 소개 △전주시 인권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설명 △인권지역현안 공유 △네트워크 구축

을 논의하는 인권센터와 인권단체의 첫 만남의 자리다.

이날 1차 초청 간담회에서는 여성분야 단체 및 관련부서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센터 소개와 단체별 인사, 분야별 지역 현안문제 논의 등 사람 중심의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이해와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병용 전주시인권센터장은 “이번 분야별 네트워크 초청 간담회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교두보로서 인권의 본질 및 분야별 흐름을 함께 공유하고 인권 증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간담회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전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발빠르게'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 방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 등 현안사업 집중 건의

전북도는 주요사업들의 국가예산이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편성 전부터 지휘부가 부처 방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지난 9일 농식품부, 기재부, 국토부 등 5개 주요부처 실감장을 차례로 만나 사업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국가예산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을 방문,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 사업 추진을 집중 건의했다.

이어 해수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을 방문, 어항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업인들의 극심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나 국가어항 지정고시 지연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개야도 국가어항’의 조속한 국가어항 지정고시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문체부 박태연 관광산업정책관을 만나, 문체부 용역을 통해 수립된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등 11개 핵심사업의 2019년 국비 168억원의 지원과 최근 군산조선소 및 GM 군산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의 관광·여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군산 근대역사 문화콘텐츠 체험관 조성’을 위한 국비 3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기재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 면담을 통해 새만금 내륙어선의 외출이동에 따른 수용능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여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타 통과를 설명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4월)전인 3월중에 지휘부 등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 및 대선 지역공약, 경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 설득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함께 나누는 사랑·행복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9일 41개 자원봉사 단체와 20개 수요처 관계자와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4판)

전주지방단체 대상 선거법 안내

전주시혁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전주시자원봉사단체 임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전주시혁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 단체와 단체의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설명,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며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